



제작  한국여성민우회

제작후원  살림포럼 후원  미래포럼



전업주부 25년차에게
국민연금이란...



해 지기 전에
퇴근 한 번 해보자!



26살,
여자 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18살,
정치에 할말 있음

18대 대선,
우리가 원하는 건?

복지국가!



행복 마트의 직원은
행복하지 않다



면접을 볼 때마다
뭔가 반복되고 있다



요즘은 전화받기가 무섭다



교사인 것이 자랑스러운
새내기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잠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숨이 늘었다



딱! 반만 올라가면
일중인데...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 복지국가

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입니까

2012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국가'입니다.

18대 대선의 정책 경쟁 과정은 곧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대답은 정확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대답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성평등' 복지국가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는 성평등 관점 없이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 이하,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 남녀임금격차 OECD국가 중 1위인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란 정확히 말해 곧 '빈곤의 여성화'입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 또한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도 기존 사회가 사회 안전망을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여겨온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남성에게는 생계를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여성에게는 돌봄을 책임지기를 요구하는, 성역할 규범에 바탕을 둔 가족이라는 사실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현실적인 대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국가 기획은 한 사회의 철학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전 사회에서 '복지'가 약자에 대한 일방적 시혜였다면,

지금 우리가 꿈꾸는 '복지'는 민주주의와 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지'는 '성평등복지국가'에서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성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제안합니다

성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복지 8개 기본방향과 14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4개의 정책과제들은 모두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정책 방향과 과제들이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성평등 복지국가 8개 기본방향과 14개 핵심과제

기본방향 1	정책과제 1	1인 1국민연금제	4
	정책과제 2	점심시간 유급화	5
기본방향 2	정책과제 3	차별금지법 제정	7
	정책과제 4	국회의원 남녀동수제	8
기본방향 3	정책과제 5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10
	정책과제 6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11
기본방향 4	정책과제 7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30% 확충	13
기본방향 5	정책과제 8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15
기본방향 6	정책과제 9	초중고교 실질적 무상교육화	17
	정책과제 10	1학급 2교사제	18
기본방향 7	정책과제 11	반지하 점진적 폐쇄	20
기본방향 8	정책과제 12	30세 유방암 의무검진	22
	정책과제 13	인공임신중절 법제화	23
	정책과제 14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24

기본방향 1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1

연금 가입구조를 1가구 1연금 구조에서 1인 1국민연금제 로 개편하여 여성의 독립적 연금 수급권을 보장

어머니는 12년 전 작은 식당을 내면서 이제는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겠다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3년 전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식당 문을 닫으셨고 결국 어머니 당신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이 사망하면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유족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당시에는 일을 그만 둔 전업주부 상태였고,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연금을 낸 기간이 9년이나 되는데 그 연금이 사라져버린 것도 황당하지만, 그 이유가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국민'연금입니까? 그럼 전업주부는 국민이 아닌가요?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2

점심시간 유급화 로 실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점심시간이 유급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게 더 놀랍다. 일하려면 밥 먹어야 하는데, 중간에 밥 먹으며 머리를 리프레쉬~ 해야 오후에도 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건데, 왜 유급이 아니지? 업무준비를 위한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데, 오후의 근무를 위해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게 불필요한 시간으로 취급되는 건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유급화되면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테니 1석 2조! 더군다나 한국은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에서도 제일 긴 나라 아닌가. 노동시간을 줄여야 아이도 키우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자기 삶 기획도 하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일도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 유명한 "9 to 5(9시 출근 5시 퇴근)" 좀 해보자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3

차별금지법 제정

으로 성별, 성적지향, 장애, 학력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실현

| 기본방향 2 |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꿈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관련한 자격증도 공부해서 땀과 마침 그 시기에 뜬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했다. 자격요건에 경력이나 학력 제한이 없어서 딱이다 싶었다.
있는 직장까지 빌려서 면접 보러 갔더니 나한테만 하는 질문은
"머리가 왜 이리 짧으냐?", "자격증 말고 졸업증은 없냐?", "회사하면 새벽까지 하는데 술은 잘 마시냐?" 이런 식이었다. 점점하면서 불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이걸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은 게 아니었다. 가방끈 짧은 것도 다 연관되어 있다.
학력도 성별도 차별하지 않는 사회라는 공익광고는 많더니 정작 이런 걸 금지하고 예방하는 기본법은 없다.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아닐까?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4

적극적 조치로서의
국회의원 남녀동수제
로 결과적 평등 실현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전부 300명인데 그 중에 여자는 47명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아저씨가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더 충격인 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같은 나라는 국회의원 중 거의 절반이 여자더라고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여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적은 건 민주주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헌법 제1조를 개정해서 "법은 여성과 남성이 직업과 사회에서 책임과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대요.
선거에서 남자와 여자 후보가 같은 수가 되게 하는 "남녀동수제"라는 것도 하고요.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세계 87위라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방향 3

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책과제
5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하여 소득의 기본을 보장

드디어 월급날. 돈 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월급날만 기다리긴 하지만 통장을 확인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1인 가구 월 평균생계비가 141만원이라는데, 하루 8시간씩 꼬박 한 달을 일해도 시급 4,580원에 월급 95만원이다. 매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정해져서다. 게다가 뉴스를 보니 여성노동자 중에서 15% 이상이 이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남일 같지가 않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가인상율도 못 따라가는 금액으로 무슨 생활안정이 도모되나 싶다. 지금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하다던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면 적어도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은 이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비가 모자라 빚을 지며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책과제
6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 하여 노후 소득을 현실화

제 앞가림하기에도 빠듯한 자식들에게 나까지 부담이 되고 싶진 않다. 몇 년 전에 무릎수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내 밥벌이는 할 수 있을 정도라 마을버스 타고 다니며 청소 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작년에 나이가 많다고 짤렸다. 칠십 먹은 나를 써줄 곳은 없으니까 막막했다. 몇 달 전부터는 옆집 노인네랑 같이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 경기가 불황이라고 단가를 30원이나 줄였다. 하루 온종일 줍고 다녀도 해질 때쯤 고물상에 가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3000원. 한 달로 치면 10만원도 안 된다. 이 돈에 노령연금 9만원 하면 대충 20만원. 찬거리랑 약값만 해도 감당이 안 된다. 갑자기 몸이라든 더 고장날까봐 하루하루 사는 게 그저 걱정이다.



사회구성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책과제
7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전체 시설 대비 30%로 확충 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화

| 기본방향 4 |

사회구성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마냥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집이 시원찮으면 지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어린이집 급식이 어찌고 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믿지도 못하는 어린이집에 나랏돈만 갖다 주는 꼴인 거예요. 그런데다 무슨 특별 활동비는 또 그렇게 많은지, 장삿속인 걸 알면서도 막상 애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가 어렵죠. 국공립은 그나마 낫다는데 내년까지 밀려 있는 대기자 수가 줄지를 않아요.

어린이 집도 그렇지만 노인요양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요양기관은 심지어 기저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던데. 누워만 계시는 분들을 돌보는데 요양보호사 수가 적으니까 그때그때 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남기려고 하니까 사람을 적게 쓰는 거라던데.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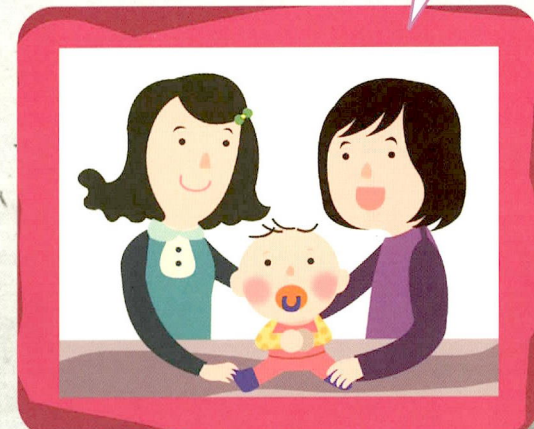
정책과제
8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으로 대안적 가족구성권의 기초 마련

| 기본방향 5 |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정'하다"고, 가족은 끝없는 기대와 미안함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은 내게 소중한 관계이기 이전에 '의무'로 다가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꾸려보고 싶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보살핌을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월드의 구속이 있는 결혼은 내가 원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나는 십년지기 절친과 고락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도 입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기는 우리를 뭔가 이상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건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정당이고, 다른 가족은 다 '오답'이라는 생각 아닌가요?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어떻게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가족이라고 느끼고 약속한다면, 그게 바로 가족 아닐까요.



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9

초중고교 실질적 무상교육화 를 통해 교육 공공화

| 기본방향 6 |

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회사일로 입학식에 못 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제부터가 더 큰일이네요. 학교수업은 오전에 끝나는데, 저나 남편이 퇴근하기까지 어디에 아이를 맡겨야 할지 난감합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그 시간을 때우자니 일주일을 채우기 위해 과목을 서너 개는 신청해야 하는데 그 돈이 10만원, 사교육 기관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뽀로디언도 사오라고 하고, 실로폰도 사오라고 하고, 물감에 크레파스 등등. 사గా야 할 준비물이 이렇게 많으니 또 10만원이 훌쩍.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안 들고 안심할 수 있어야 무상교육 아닐까요?



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10

1학급 2교사제 로 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학교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지영이는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충분히 익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을 늘 버거워하지요. 그러니 수업 시간이면 지루해하고 자꾸 딴짓을 할 수밖에요. 진수는 숫자 개념을 어려워합니다. 수학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먼 산을 보다간 이내 옆에 친구들을 괴롭히지요.

다만 각자의 속도가 다를 뿐인데, 표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많은 아이들을 열등아로 만듭니다. 지영이나 진수의 감춰진 재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재능에 다가가는 일은 교사 한 명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당장 매 수업마다 그 아이들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전체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도 맞추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각자의 개성과 학교가 되려면 학급에 선생님이 적어도 두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방향 7

사회구성원은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회구성원은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책과제
11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해 반지하 점진적 폐쇄

집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온다. 이번엔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 살이 어언 5년. 허리띠 졸라매며 일했는데도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반지하 아니면 옥탑방이다.
낮에도 어두컴컴해서 항상 전깃불을 켜야 하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다.
작게 난 창문을 통해 본 바깥풍경은 시끄러운 구두소리와 먼지 묻은 운동화.
환기 좀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보면 하수구 냄새와 지나가는 행인들 소음이 아래로
내려온다. 장마철이면 늘 습기 걱정과 빗물이 집에 들이닥칠까 조마조마.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사는 반지하에서 딱! 반만 올라가면 1층인데...



기본방향 8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12

여성 현실에 맞는 적정의료 실현을 위해 유방암 의무검진 연령을 30세로

전화벨이 울린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후배의 전화번호가 뻗다. 무슨 일이지? 불안하다. 후배의 갑작스런 전화가 두려운 건 최근에 화병 소식이 많아서다. 아직 40살도 안된 지인들의 암 발병 소식. 벌써 한 두건이 아니다. 특히 유방암. 자료를 뒤져봤더니 최근 15년 사이에 유방암 발병률이 4배가 증가했단다. 특히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0대 이하 발병률이 전체의 50%가 넘는다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가보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라던데, 40세부터 시작하는 검진을 좀 더 앞당길 순 없는 걸까?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13

여성의 사회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공임신중절 법제화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저도 당혹스럽고 여자 친구도 어쩔 줄 몰라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긴 하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여자 친구도, 저도, 비정규직으로 간신히 생활비나 이어갈 정도로 벌고 있거든요. 방이라도 전세로 만든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를 낳는 건 우리에게도 아이에게도 잔인한 일입니다. 여자 친구와 상의 끝에 결국 답은 임신중절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것도 두렵습니다. 유전적, 선천적, 전염성 질병의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은 불법이라서 안전한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면서요? 살자고 하는 선택인데, 오히려 수술을 하다가 여자 친구가 위험해지면 어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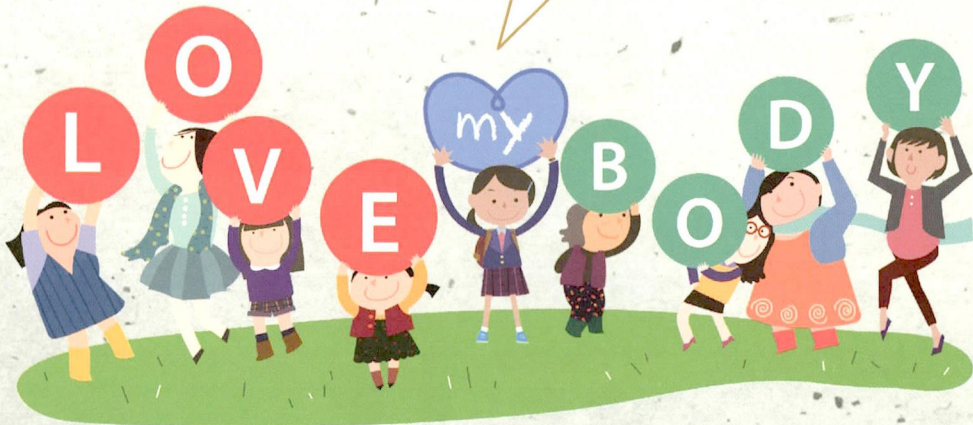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과제
14

몸다양성보장법 제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한계 설정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몸다양성이라니 무슨 말일까? 물음표의 연속... 그러다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느낌표! 그래, 우리에게 여성의 몸은 '날씬한 몸, 날씬하지 않은 몸'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존재하고 있었구나. 마치 사람 수보다 부족한 의자를 두고 서로 앉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여자다운 몸'이라는 의자에 앉기 위해 꺾어야 하는 일상이
사실 너무 고되다. 하지만 점점 작아지는 옷가게의 표준사이즈, 지하철 광고판마다
걸린 다이어트 성공담, 인터넷 사이트마다 뜨는 성형 광고 비포/애프터를 보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고되지만 결국 다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류 매장에 모든
사이즈의 옷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여 범을 만들었다는데, 영국에서는 포토샵을
너무 심하게 한 광고는 여성의 몸 이미지를 왜곡시킨다며 규제를 한다는데,
왜 한국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에서 일상 속의 여성운동을
바로, 당신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우)121-847 서울시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블로그 womenlink1987.tistory.com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이메일 mindfull@womenlink.or.kr 트위터 @hifive4w

참고자료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 2012,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로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2012, 한국여성민우회
*참고자료는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